

오피니언

光日春秋

이돈희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문제는 교육의 일 반수요자 뿐만 아니라 정책담당자에게도 좀처럼 벗기 어려운 명제로 썩어져 있다. 그 규모도 점점 더 커져만 간다. 한국교육 개발원이 2003년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학생당 월 평균 23만 8천만원의 사교육비가 지출되고 있고, 국가적 총액은 13조 6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학생의 납입금을 포함한 공교육비 총액의 3분의 1 수준을 훨씬 넘는다. 저소득층에게는 생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부담이고, 그 부담 능력의 차이로 인한 교육의 불평등적 양극화는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사회적 문제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비단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문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사정은 이대로 방치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의 인식인 것 같다.

등 현상이 문제가 된다면 정부가 저소득층에 사교육비를 지원해 주면 될 것 아닌가라고 한 것이다. 그 말이 당시 우리의 귀에는 한국의 사정을 잘 모르는 외국 학자의 “철없는 소리”로 들렸다. 물론 그 평가 위원은 우리 사회에서 시행하는 사교육이 어떤 성격의 것이며, 어떤 피해를 안고 있는가를 잘 모르고 있었을 줄로 여겨진다.

사교육이 정당화 되려면

그러나 그가 생각하기로는 자녀의 교육을 위하여 돈을 쓴다는 것이 나쁜 것이 없고, 부담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의 부모들에게 그들의 자녀를 위하여 사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교육복지를 지향하는 국가로서는 당연히 할 만한 정책적 사업에 속한다고 여겼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시 생각해 보면, 가정이나 나라가 돈을 탄 곳에 쓸 것을 절약하여 교육을 위해 쓸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적게 쓰게 해서 경제적 능력이 모자라는 사람과 똑같이 쓰게 하는 것으로 사교육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은 사교육의 문제를 교육적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보는 것일 따름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오히려 사교육을 위한 비용이 무엇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가이다. 그 비용이 학교의 교육력이 미치지 못하는 특별한 능력의 계발이나 보충적 부분에 쓰이고 있다면 교육적으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비용의 배분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이다. 그러나 근시안적 이기심에 매여 단순히 진학의 경쟁을 위한 “점수 따기식”의 학습에 그 비용이 쓰이고 있다면, 그것으로서는 사교육이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다. 창의력, 자료해석력, 문제해결력 등의 고등정신능력의 계발과는 거리가 먼 단순암기, 기계적 계산, 죽집계 정답 맞추기, 강제된 공부 등의 알팍한 학습을 기르기 위하여 그 많은 사교육비가 사용되고 있다면, 그러한 사교육비는 적게 쓰라 많이 쓰라고 하기 전에 교육적으로 해악이며 사회적으로 낭비에 불과하다.

능력이 자라는 만큼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느끼고 있을 경우의 이야기이다. 이런 경우 그 의무를 자력으로 감당하지 못할 때 사회나 국가의 지원을 기대하거나 요청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서름하고 있는 사교육의 문제는 반드시 부담능력의 차이로 인해서 초래되는 양극화의 문제만이 아니다. 공교육이나 사교육이나 간에 비용을 많이 쓸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적게 쓰게 해서 경제적 능력이 모자라는 사람과 똑같이 쓰게 하는 것으로 사교육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은 사교육의 문제를 교육적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보는 것일 따름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오히려 사교육을 위한 비용이 무엇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가이다. 그 비용이 학교의 교육력이 미치지 못하는 특별한 능력의 계발이나 보충적 부분에 쓰이고 있다면 교육적으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비용의 배분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이다. 그러나 근시안적 이기심에 매여 단순히 진학의 경쟁을 위한 “점수 따기식”의 학습에 그 비용이 쓰이고 있다면, 그것으로서는 사교육이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다. 창의력, 자료해석력, 문제해결력 등의 고등정신능력의 계발과는 거리가 먼 단순암기, 기계적 계산, 죽집계 정답 맞추기, 강제된 공부 등의 알팍한 학습을 기르기 위하여 그 많은 사교육비가 사용되고 있다면, 그러한 사교육비는 적게 쓰라 많이 쓰라고 하기 전에 교육적으로 해악이며 사회적으로 낭비에 불과하다.

부모의 이기심이나 기회주의적 계산에 의해서 젊은이들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하고, 그들의 잠재력을 원천적으로 파괴하는 일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자행하는 것은 무지의 소행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악에 속한다. 우리는 누가 사교육비를 많이 쓰고 누가 적게 쓰느냐를 두고 싸울 것이 아니라, 그 비용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사회적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소요되는 적정한 비용을 어떻게 정의롭게 배분할 수 있는가를 두고 진지하게 숙의할 필요가 있다. <민족사관교 교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충격 큰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중단 선언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야기된 남북 냉각관계가 이산가족 상봉 중단으로 비화됐다. 북한은 19일 “북남 사이에는 더 이상 흠어진 가족, 친척 상봉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게 됐다”며 이산가족 상봉 중단을 전격 선언했다. 이에 따라 8·15에 예정돼 있던 이산가족 특별화상상봉이 무산되고 금강산면회소 건설도 중단될 수밖에 없게 됐다.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 중단의 이유로 지난번 장관급회담에서 남측이 인도주의적 사업으로 해오던 쌀과 비료 지원을 일방적으로 거부했다는 사실을 들었다. 남측이 6자회담 복귀 등을 거부하자 이산가족 상봉 중단 카드를 꺼내 남측을 압박해온 것이다. 북한이 이산가족 문제를 대북지원과 연계시킨 행위는 잘못됐다. 인도적 사업이라 해도 민족 최대의 비극인 이산가족 문제와 대북지원이 같을 수는 없다. 수많은 세월을 이산의 고통속에서

살아온 가족들의 처지를 생각한다면 인본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산가족 상봉을 시켜라도 베푸는 양정치적으로 흥정하고 있으니 개탄스럽다.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 중단 선언을 철회해야 한다. 미사일을 발사해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한 쪽은 남한이 아니라 북한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결의안까지 통과돼 국제사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현실에서 쌀과 비료 지원을 일시 중단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남측을 압박하는 것은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산가족 상봉은 어떤 이유에서라도 절대 중단되어서는 안되는 인본적 행사다. 그런 행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고 통보한 것은 책임있는 자제가 아니다. 지혜를 모아 대화 채널을 가동하고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실현시키는 것이 남북관계가 장기간 견색국면에 빠져드는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는 길이다.

당정 경제정책 ‘엇박자’ 경제 살릴 수 있겠나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9일 경제정책에 대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경기활성화의 필요성과 정부의 역할 문제에 대한 당정 간 이견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이 재삼 확인된 것이다. 김 의장은 이날 권 부총리에게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장은 특히 5·31 지방선거 결과를 거론하면서 “국민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와 당을 심판한 것”이라며 “정부의 경제수장이 당의 의견을 존중하고 뒷받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권 부총리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 당과 함께하겠다”면서도 “IMF 외환위기 이후 구조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단기적인 경기 활성화 대책은 효과적이지 않다는 반박인 셈이다. 경제정책을 둘러싼 당정 간 이견은

지난 12일 국회 재경위의 경제부총리 청문회에서도 드러났다. 열린우리당 강정관 정책위의장과 권 부총리는 성장률과 체감경기, 경기부양 등을 놓고 뚜렷한 시각차를 보인 것이다. 당정이 경기 진단과 처방을 놓고 엇갈린 시각차를 표출하는 것은 정책 조율마저 원활치 않음을 확인해준 것이다.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당정의 엇박자는 경제주체들의 불안 심리를 부추기고 시장의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심리저요의 하락, 국제유가 급등,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태 등으로 경제성장의 하방위험이 커지고 있다. 서민경제도 바닥을 기고 있고, 취업난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한마디로 우리 경제는 비상사태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은 당정이 경제 정책을 놓고 말 싸움이나 할 때가 아니라 철저한 정책공조를 통해 민생 경제를 살려내는 것이 급선무임을 명심해야 한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기고



문경래

바야흐로 산과 바다가 손짓하는 여름 휴가철이다. 머지않아 아이들 여름방학도 시작될 것이다. 지금쯤이면 대부분 휴가계획을 짜느라고 신경이 켜나 쓰일 것이다. 모를지 휴가란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지친 몸과 마음을 쉬게 하고 재충전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꼼꼼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모처럼의 여유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휴가의 목적을 비롯하여 일차·장소·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낭패를 당하지 않는다. 여기에 나만의 휴가가 아닌 가족 모두가 사랑을 더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인파로 넘쳐나는 관광지, 고가의 해외여행 등이 우리에게 제대로 된 휴식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이렇듯 농촌은 부모에게는 옛 고향의 향수를 느끼게 해주고, 자라나는 청소년에게는 전통문화와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곳이다. 울 여름휴가를 농촌으로 권하는 이유는 또 있다. 첫째, 상업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주차장이 된 듯한 짙은 도로, 북적이는 인파, 행락객을 기만하는 알뜰한 상품 등으로 인해 기분을 망칠 이유가 없다. 유명 관광지나 전문 숙박업소에 비해 비교적 가격도 저렴하다. 농촌이야말로 조용하고 아늑한 휴가지로 그만이다. 둘째, 도시민과 농업인의 상생(相生)을 들 수 있다. 체험마을에서 숙식을 하면서 토산품을 구입하면 수입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적으나마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여름휴가,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

여행지를 선정하면서 이런저런 고민에 쌓인 분들에게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인근에 관광자원이 풍부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권하고 싶다.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되면서 농촌체험마을에서 여가를 보내는 단체, 가족들이 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농촌체험마을에는 온 가족이 참여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마당에 모깃불을 피워 놓고 그 속에 낮에 밭에서 직접 캔 감자를 구워 입가에 감정칠을 하면서 먹는 맛을 무엇과 비교하겠는가. 도시의 밤하늘보다 유난히 낮게 반짝이며 금세라도 쏟아질 듯한 별을 보면서 나즈막히 가족합창이라도 하다보면 부모는 부모대로, 또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바쁜 나날에 쫓겨 서투르게 다소 부족했던 마음을 연기에 실어 흩날려 보낼 수 있다.

셋째, 농촌을 바로 알고 느껴볼 수 있다. 농업·농촌을 지키기 위해 정부·농협 등이 노력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 마치막으로 자라나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배우게 할 수 있다. 각급 학교의 교과서에 나오는 농촌의 환경보전기능과 지역사회복지기능을 직접 보고 체험함으로써 농업이 지니고 있는 미래의 생명가치를 바로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밖에도 가족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웰빙여행지로 농촌을 추천하는 이유는 얼마든지 많다. 때문에 최근 자연이 고스란히 살아 있는 아름다운 농촌으로 도시민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농촌체험관광이 뜨고 있는 것이다. 올 여름엔 적은 비용으로 건강과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뜻밖의 내용이 물씬 풍기는 농촌을 찾아가자. <농협중앙회 구례교육원장>

독자마당

고속도로 사고시 정확한 사고 위치 찾는 방법

도로공사 불개이트 및 상향살이에 근무하다 보면 도움 요청 전화를 받는데, 차량의 정확한 위치를 몰라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고속도로에 1km마다 설치된 긴급 전화를 이용하면 즉시 위치 파악이 가능하지만 만일 전화의 경우 그렇지 않다. 현재 위치를 알려달라고 하면 고속도로 이용차 대부분이 “어느 불개이트에서 몇 분 정도 지났다”, “어디 부근이다” 등으로 말해 위치 파악이 힘들다. 물론 이 같은 정보만으로도 위치 확인은 가능하다. 하지만 정확한 사고 지점을 알고 찾아가는 것과는 처리 시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때 중앙 분리대와 갓길을 보면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작은 이정표들을 볼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이정표가 중앙분리대와 갓길 녹지대에 표시되어 있다. 중앙 분리대에 1km마다 녹색바탕에 하얀색 글씨로 만들어진 이정표는 기점과 함께 거리를 표시해 주고 있다. 또 커리만을 알려주는 이정표는 갓길 녹지대 200m마다 설치되어 있다. 고속도로는 작은 사고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운전할 때 염두에 두고 운행한다면 좀 더 안전한 휴가 길이 될 것 같다. ▲국성아·한국도로공사 협력영입소

절전, 각가정의 작은 실천이 중요하다

광주일보를 읽다보면 여름철에 전력소모가 많으므로 절전에 관심을 갖자는 기사가 자주 나온다. 가정에서는 보통 TV부터 오디오·선종가·에어콘·컴퓨터·프린터·식기세척기 등 플러그를 꽂아놓지 않는 전열기구가 아주 많다. 그런데 필요치 않는 낮 시간에 플러그를 뽑는 것만으로 1년에 2억달러, 우리 돈으로 2천억원이나 절약된다고 한다. 특히 냉장고는 플러그를 빼놓을 수 없지만 이것도 문을 한번 여닫을때마다 0.35%의 전력소비가 증가되기 때문에 여닫는 횟수를 4번만 줄여도 한달에 0.75kWh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한다. 음식물을 식혀서 넣는건 기본이고 용량도 60%만 넣으면 절전효과가 아주 크다. 여름

철엔 잘 상하므로 음식을 많이 해두는 것 자체가 무리다. 세탁기도 기계에는 보통 15분을 기준으로 돼있으나 이것을 10분으로 단축해 써보면 역시 절감효과가 크다. 다리미 또한 여러 옷을 모아왔다가 한번에 일처리를 끝내면 절전효과가 있다. 다리미는 다른 기계와 달리 전력소비가 아주 큰 가전기이다. 한 가정에서 하나씩만이라도 실천하면 가정 실업에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도움을 주고, 에너지 소모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와 물가를 내리게 하는 효과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주부들의 지혜가 필요하다. ▲강석훈·광주시 남구 주월동

뒷발관리로 일석이조 효과 노리자

도시 인근에 있는 주말 농장을 분양받아 고구마와 옥수수·고추·상추 등을 심고 남편·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재미가 쏠쏠하다. 수확물은 적지만 흙의 대가라는 생각을 하면 여간 즐겁다. 최근에는 친환경 재배를 해 보겠다는 제조사와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비가 내리고 나면 어김없이 잡초와 병균이 발생하고 조금만 기울어도 잡초에다가 온 발을 빼앗기고 만다. 친환경 농산물이 비싼 이유를 알 것 같았

다. 주말농장에서 어린 아이들과 땅을 흘려보자.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자녀들이 흙의 소중함과 친환경 농업의 필요성을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우리 농산물의 중요성을 배우고, 풀을 뽑고 농작물을 수확하면서 노동의 대가가 맛보게 하는 것 자체만으로 훌륭한 교육이 될 것이다. ▲이선화·광주시 서구 마죽동

無等鼓

같은 시기에 같은 일이 되풀이 되는 것을 연례행사라고 표현한다. 최근 몇 년간 어김없이 발생하는 수재(水災)야말로 달갑지 않은 대표적인 연례행사다. 전국적으로 큰 비가 쏟아져 한반도가 물난리를 겪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퍼붓는 물 폭탄 세례에 50명이 넘는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 손실이 발생했다. 이번에도 인재(人災)나, 천재(天災)나를 놓고 시비가 분분하다. 서울 양평동 수재민들은 인근 지하철 공사장때문에 안양천이 범람했다며 국가와 시공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준비 중이다. 사법기관에서 최종 판단을 내릴 일이나 정부의 치수정책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 지구 온난화로 기상변이가 늘면서 태풍은 갈수록 강해지고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호우가 쏟아지는 사태가 빈발하고 있으나 능동적인 대처는 찾아보기 힘들다. 태풍의 대명사 격인 지난 1959년 ‘사리’의 경우 하루 최대 강우량이 300mm

를 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하루 500mm를 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치수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GNP의 0.07%로 일본의 7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무분별한 난개발도 재앙을 키우는데 한 몫 했다. 급조된 댐은 교량들이 물길에 민가로 돌려 피해를 키웠다는 것이다. 농경사회에서 정보사회로 변모하고 있는 요즘에도 치산(水災)은 국가의 기본이다. 오히려 기상변이 시대에 물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비슷한 재앙이 매년 되풀이되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점이 산적해 있다는 반증이다. 치수의 근간인 다목적댐 건설과 하천 정비의 환경논리에 밀려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자연재해보다 더 처참하게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없다. 효율적인 방재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 언제까지 비싼 수입로만 지불하면서 천재지변 탓만 할 것인가. /김재철 사설2부장 ajkim@kwangju.co.kr

年例 행사 ‘물 난리’



Table with Kwangju Ilbo details: 회장 許宰喆,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 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시 회 2 부 2200-619,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편 집 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경 치 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경 제 부 2200-617, 체 육 팀 2200-627, 사 회 1 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0, 총 무 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국 2200-521, 판 매 부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지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시 업 2 부 2200-552,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명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